

칼럼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독일을 경제강국으로 만든 여섯번째 힘

독일 경제의 성공 요인에 대한 필자의 칼럼(관련기사: 독일을 경제강국으로 만든 다섯가지 힘)에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다. 그런데 거기에 미처 언급하지 않은 또 한가지가 있다.

법률을 철저히 대하는 국민성이다. 독일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민법전이 오르기도 하는 나라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벽에 낙서가 잔뜩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서서 내려가던 두 아주머니가 하던 말이 기억난다.

“저런 걸 처벌하는 법조항이 있을 텐데...”

필자는 법질서의 수호자 독일 경찰의 진면모를 1987년 초가을 남부지방 여행 중에 경험할 수 있었다. 필자가 살던 뮌헨에서 베르히테스가텐은 약 세시간 거리다. 잘츠부르크행 고속도로를 따라가다가 지방도로로 접어들어 이리저리 구경도 하며 첫번째 목적지 베르히테스가텐에 도착했다. 이 자그마한 마을은 1938년 9월 영국 수상 체임벌린이 히틀러와 주테넨 문제를 협상하던 바로 그곳이다.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알프스의 산지 사이로 깨끗하게 닦인 한적한 도로를 따라 잘츠부르크로 향했다. 그러던 중 독일-오스트리아 국경 세관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한 독일 경찰관과 만나게 되었다.

경관은 내 여권을 체크한 다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국경에서 운전면허증을 보자고 한 적은 처음인데 아마 외국인이기 때문인 것 같았다.

“독일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계시죠?”

“독일 면허증은 없고 국제면허증이 있어요.”

“어디 좀 볼까요?”

잠시 면허증을 들여다보던 경관은 뭔가 확인하겠다는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야 그는 다시 나와서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저... 이 면허증은 인정할 수 없는데요. 잠시 내려 주시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지요.”

그 경관의 설명에 따르면 필자가 가졌던 국제면허증은 발급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가 입국 사실을 조회해 본 결과 소지자가 독일에서 유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지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해도 운전면허에 관해서는 내국인으로 취급되어 반드시 독일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필자는 국제면허증을 한

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뒤 우편으로 전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경관은 두꺼운 법전을 펼쳐서 조문을 찾아 보여주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 무면허 운전이 되지요.”

그 경관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자기도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고 복잡한 관계규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운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조서작성을 시작했다.

“별일은 없을 겁니까.”

“...”

“독일에서는 벌금액수가 소득에 비례합니다. 귀하는 학생이니 수입이 없고, 따라서 벌금 액수는 0마르크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왜 합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집에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경관도 한참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몇가지지를 제안했다.

“뮌헨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세요.”

이에 친구에게 전화를 했으나 마침 집에 없었다. 있었다 해도 그 먼 시골까지 누군가 또 한사람을 데리고(차가 2대이므로) 필자를 데리러 올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기 보이는 것이 오스트리아 세관입니다. 한 200m 되지요. 거기까지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면허증이 유효하기 때문에 잘츠부르크까지 가서 거기서 차를 세워두고 기차로 뮌헨으로 돌아간 뒤 독일면허증을 발급받으셔서 차를 가지러 돌아오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는 표정이었으나 필자로서는 실행 가능성이 까마득한 무리한 계획이었다.

난처한 표정을 짓고, 고민하는 척도 하면서 시간을 끌어보기로 했다. 약 5분이 지나갔다. 경관은 자초지종을 들었다고 씩씩하게 말하고는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이 조용조용 말을 꺼냈다.

“우리는 지금 바쁘기 때문에 당신 일에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오던 방향으로 약 3~4km 돌아가면 길가에 레스토랑이 하나 나오니까 거기서 공용전화가 있어요. 그곳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거기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당신을 데려다 주고는 금방 돌아와야 합니다.”

“.....”

“내 말뜻을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약 한달 후에 바이에른 주의 검찰청에서 그때 있었던 무면허 운전 건은 ‘사안이 경미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절차 진행을 중단한다는 통고장 집으로 날라왔다.

법률을 대하는 독일인의 진지한 태도는 독일을 강국으로 만든 여섯번째 힘이 아니라 첫번째 힘일 수도 있겠다.

社 說

전혀 뉘우칠 줄 모르는 전두환

1979년 12월 일어난 신군부세력의 12·12 쿠데타 주동자이며 이듬해 1980년 5월 광주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씨가 1년여만에 광주를 찾았으나 이번에도 광주 시민들에게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았다. 전 씨는 27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에 도착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보아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괴롭힘당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전씨는 알츠하이머 등 건강 문제를 핑계로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작년 3월 마지막 해 법정에서 출석했다. 그때도 ‘발포 명령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고 거칠게 화만 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로 광주 시민이 증인이다. 전일빌딩은 5·18 당시 전남도청 광장 등에서 쫓겨온 시민들이 몸을 숨겼던 곳이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학생, 간호사, 성직자 등 20명이 5·18 당시 광주 시내 상공에서 헬기 기총소사를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전남도청 건너편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270개의 탄흔이 발사각도 등으로 볼 때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나왔다.

그런데도 광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성직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워 광주 학살 책임을 모면하려는 전씨는 그야말로 괴롭힘당한 것이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드러난 전씨의 뻔뻔한 행위도 어이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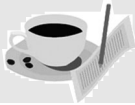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도 못 나간다면 지인들과 버젓이 골프를 치고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유명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했다. 전씨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광주 시민에게 사과대죄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기견 이제 버려지는 일 없어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작년말 1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수가 증가할수록 유기되는 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수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병들고, 나이 많아서 등 선블리 판단, 죄 없는 반려 동물이 유기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큰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입양이다 보니 결국 많은 개가 유기견으로 전락해 처리 되거나 팔려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유기 동물을 유기했을 때 벌금 내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처벌도 따라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제는 관련 대책을 수립 늘어나는 유기견이 생기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식의 전환이다.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황신욱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호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